

도, “내년 ‘민생경제 재도약’ 원년”

소상공·기업·일자리 등 3대 분야 집중 지원… 내년도 종합대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통상 마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쌍존'에서 '쌍장'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2026년 민생경제 재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기업성장 육성,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의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총 64개 사업, 4,416억원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대책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진 의미있는 성과이다.

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중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6년 민생경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유관기관 및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도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2026년을 민생경제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24만개 모든 소상공인을 종합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2026년부터 3년간 총 20억원을 투입해 화재·상해 위로금 등을 보장하고, 풍

수해 보험 자부담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채움통장 500억원을 조성해 긴급 소액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자금과 연계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재기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올해보다 30% 늘어난 1조 7,000억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직접적으로 견인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한 보조사업 대상이 되는 골목형 상점가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80개까지 확대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불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는 기존 487개에서 540개까지 확대하고 공공요금 및 물품 지원 등 업소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 분야에서는 자금 공급과 판로 개척을 동시에 지원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유도한다.

중견기업 네트워크 구축과 ESG 경영 진단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간 상생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육성장금은 올해보다 300억원 늘어난 3,3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국내의 판로 개척과 온·오프라인 시장 다각화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베트남, 인도 등 해외거점센터를 활용한 윈윈 수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노후 산업에 125억원을 투입해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기존 농공단지에 한정됐던 환경개선 사업을 일반산업단지 확대해 44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이음 프로젝트 등 고용노동부 공모에 적극 대응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2024년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일

자리지원단 고용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24~35시간 근무하는 유연근무형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400만원, 90여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구직자·재직자 직무교육을 올해보다 17개 늘어난 총 94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하고, 신규로 AI·첨단기술 분야 11개 과정을 신설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1년까지 탄소 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45억원을 조성해 근로자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초등학부도 10시 출근제 확대, 노동자 작업복 세탁비 지원 등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도 추진한다.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은 유관기관과 14개 시군의 특화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실 제공)

“서해안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민주 윤준병 의원 “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 위한 마지막 과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호남 서해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라며 “서해안 철도는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안 철도 건설이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 효율 개선은 물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주 신산업선 조기 건설을 통해 호남 서해안과 내륙을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해안 철도는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라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2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및 특별자치 포럼’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부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원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부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뉴스1

‘도민 알 권리에 호응하는 의정활동’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 의정보고서 발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최근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며 도민의 알 권리에 적극 호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은 23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자신이 발간한 의정활동 보고서 소개했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도의원과 시의원은 각각 연간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어 대부분 후원금이 사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에 사용되는 현실 속에서, 국 의원의 의정보고서 발간은 눈에 띄는 행보로 평가된다.

의정보고서는 시민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발간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국주영은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입법 활동과 의회 운영, 지역 현안 해결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목표적인 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 의원은 민선 8기 도의원으로 활동한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표 발의 조례 9건 △5분 자유발언 7회 △대표 발의 건의안 7건을 통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2년간 봉사하며 의회 운영을 이끌었고, 본회의 출석률 98.9%라는 높은 출석률 기록을 세우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왔다.

지역 의정활동 성과도 두드러진다. 주민 참여 예산 77건, 약 20억 원을 확보했고, 특별 조정 교부금 8건, 14억 원을 이끌어내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에 성과를 냈다. 이는 도의원으로서 지역과 의회를



동시에 아우르는 실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여성 정치인으로서 정치 공간이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편, 국 의원은 전북 최초 여성 도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혁신에도 앞장섰다.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제정, 공무 국외연수 심사 강화, 인사권 독립 정착, 의정 운영 성과 공개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반기 개정 △속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시민 참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써왔다.

한편, 국주영은 의원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 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체감 경기 가혹… 공공 구매 위한 창고 필요”

송상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북 지역 시내 거리를 걷다 보면 ‘입대’ 문이 붉은 빈 점포를 마주하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현재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전북의 경우 가계의 18%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거의 네 집 건너 한 집이 빈 가게이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주시내에서 50여개의 나들가게와 동네 구멍가게를 어렵게 모아 연합회를 결성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송상호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23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송 회장은 “지금의 현장 경기는 매스컴에서 말하는 경기보다 현장의 체감 온도는 훨씬 낫다”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의 80%가 희망을 잃고 절망하기 일보 직전이다”고 상가 현장의 비극을 전했다.

송 회장은 골목 슈퍼와 나들가게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로 ‘물류 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은 직송 시스템을 통해 싸게 물건을 공급하지만, 동네 마트들은 물건을 싸게 떼어올 곳조차 마땅치 않다. 중간 마트보다 공짜가 30~40%나 비싸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발길을 돌리게 되고 동네 가게를 찾지 않게 된다.

그는 해결책으로 “공공 구매를 위한 창고”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



“물류 시스템의 부재 골목상권 무너지는 원인 공간만 지원해 준다면 공동 구매 시스템 통해 저렴하게 물건 공급”

다. “물건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들여오고 싶어도 쌓아둘 창고가 없어 번번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전주에 거주하며 가게에 모든 생계를 걸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본인의 집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비용을 보태겠다”며 절규 섞인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행정 기관은 “시스템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 지원 대신 물티슈나 전단지 제작 같은 생색내기식 지원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주시 내에서 순수하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50여명의 회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의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컴퓨터

를 이용한 복잡한 행정 서류 작성이나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은 넘기 힘든 장벽과 같다. 송 회장은 “이전에 행정 기관에서 지원해 준 컴퓨터가 시일이 오래 지나다 보니 낡아오류가 나서 쓰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사가 안되니 자비로 교체할 엄두를 못 낸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송 회장은 지난 5년간 1만7,500명이 참여하는 단방망을 직접 운영하며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해 왔다. 중간 마진을 없애기 위해 송 회장이 이는 지인을 찾아 직접 산지에서 채소와 과일을 떼어와 미끼 상품으로 내놓으며 동네 슈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놀라운 점은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송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은 본인들의 수입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돈을 모아 베트남 다문화 가정 등에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추석에 232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지원했다고 한다.

송 회장은 끝으로 전주시와 정부에 간절한 호소했다. “도로를 파헤치거나 건물을 짓는 대신, 골목상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공간 하나만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단독 주택 하나 정도의 공간만 지원해 준다면, 공동 구매 시스템을 통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50여명의 회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의 고령층이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컴퓨터

조지훈 민주 원내대표 특보

도당 당원주권특위 위원장으로

조지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대의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당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 대의협력위원회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각계 인사와 교류·협력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의 의연을 확장하는 핵심 기구로, 지난 8월 정경태 당대표는 김현정(경기 평택시병)·박홍배(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부위원장으로 조지훈 특보를 추가 인선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당원주권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고 정청대 당대표가 핵심 기조로 채택한 ‘당원주권’의 가치와 정책을 당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만든 특별위원회로 조지훈 특보는 이원택 도당위원장 체제에서 당원주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위원장으로 지낸 바 있고, 윤준병 도당위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소임을 맡게 됐다.

조지훈 특보는 대의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역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바탕임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회·광고문의 063-288-9700

도의회,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연구원 원장 최백렬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으로부터 전북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됐다.

최형열 위원장은 인사청문에 앞서,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전임 원장의 중도 사직으로 인해 기관장 공백이 4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기관장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연구원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도정현안에 대한 의견과 지역 내 갈등 해결 방안 및 최근 논문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전북연구원장 지원 동기,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4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